

해남군, 생활인구 늘리기 본격 ‘시동’ 건다

2027년까지 年 600만 인구 목표

75개 시책·관광·스포츠마케팅 추진

월별 변동 추이·증감 요인 분석도

해남군이 새로운 인구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는 ‘생활인구’ 늘리기에 본격 나섰다.

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순명도 부군 수 주재로 생활인구 증대 관련 10개 부서가 모여 최초(킵프) 회의를 열고 분야별 중점 추진 시

책을 보고했다.

생활인구는 통근·통학·관광·업무 등으로 일정 시간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, 단순한 등록 인구를 넘어 실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람을 인구로 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.

국가 총인구는 감소하는데 반해 지역 간 인구 유지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 부도 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’을 통해 생활인 구 개념을 공식화했으며, 2026년부터는 지방고 부세 산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.

이에 발맞춰 해남군은 ‘마음의 고향, 머무름이 행복한 해남’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월 50만명, 연 600만명 생활인구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.

지난 4월에는 전 부서에서 75개 생활인구 늘리 기 신규 시책을 발굴해 추진 중이며, 7월에는 해 남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.

회의에서는 ▲관광시설 확충과 ‘해남여행’ 동 큰 이벤트’ 등 생활인구 유치 관광프로그램 추진 ▲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대회 30개·전지 훈련팀 5만명 유치 목표 ▲‘생활인구 113(매월 1

일 3시간 머물기)’ 캠페인 전개 등이 주요 안건 으로 논의됐다.

부서별 시책 발굴과 각종 행사·대회, 기관 및 단 체 주관 행사관내 유치방안도 함께 검토했다.

회의는 2024년 해남군 생활인구 현황과 월별 변동 추이를 점검하고 증감 요인을 분석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.

해남군의 2024년 생활인구는 335만명으로 전 남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중 3번째로 많은 규모다. 8-9월은 휴가철과 추석 연휴로 가장 높 았고, 5월 공휴대축제와 11월 미남축제 및 단풍

철에도 크게 증가했다.

해남군은 상대적으로 생활인구가 낮은 3-4월 에 서울·경기권과 대구·부산 등 경성권을 타깃 으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유 치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.

해남군 관계자는 “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 에서 생활인구 증대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”며 “해남과 관 계하는 생활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책을 운영하겠다”고 말했다.

/해남=박필용 기자

박용준 목포시의원 발언 ‘정당한 행위’ vs ‘막말 갑질’ 논쟁

기자회견서 부시장 공개 사과 요구

당 중장계 처분 찬반 의견 엇갈려

박용준 목포시의원의 논란이 된 발언과 관련 ‘막말 갑질’이라는 주장과 ‘지역 주민들의 안전 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원의 정당한 행위’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.

박용준 목포시의원(더불어민주당 신희동·부 흥동·부주동)은 31일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“정화활동은 당일의 기상과 현장 상 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목포시의 홍보영상 촬영만을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을 동원한 것” 이라며 “목포 부시장님이 그날 급하게 인원 동원 을 했다는 공문과 SNS 전송 메시지도 확인했 다”고 밝혔다.

박 의원은 “당시 다소 언성을 높인 이유는 ‘사 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냐’는 항의성 질문에 대해 부시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에 찌든 행정적인 답변 때문”이라며 “진정 목포시

민을 생각했다면 ‘시민의 안전을 우선해야 겠 다,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겠다’고 말했어야 하 지 않을까요”라고 부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 했다.

이어 “민주당의 당원정지 1년이라는 중장계 에 대해 목포지역위원회에서는 아무도 보낸 사 람이 없다고 하고, 전남도당에 올라간 보고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”며 “목포지역위원회는 전남 도당에 보낸 진상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라”고 촉구했다.

박 시의원은 최근 수해로 인한 해양쓰레기 정 화활동 과정에 동원된 주민 안전문제를 우려해 부시장에게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으나 목포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‘소리지르는 시의원’이라 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을 빚었다.

이로 인해 박 시의원은 소속 정당 중앙당으로 부터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장계 처분을 받고 해 당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지만, 일부 시민들 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.

한 정치평론가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“박

용준 의원은 ‘지역 주민들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의원의 정당한 행위’라고 주장하고 있 고 조석훈 목포시 부시장은 ‘시의원의 막말, 갑 질’이라는 입장”이라면서 “누구의 말이 진실에 부합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”고 글을 올 렸다.

전 시민단체 대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“목 포시는 동원령을 내려 연세가 많은 통장들과 경 령이 부족한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방파제 에서 작업하도록 동원했다”며 “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을 향해 목포시 일부 고위 직 공직자들이 ‘피해자 코스프레’를 했고, 결국 박 의원은 당의 중장계를 받았다. 이로 인해 목 포시 민심이 더욱 갈라지고 있다”고 비판했다.

이 밖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SNS와 영상 등을 통해 목포시 행정과 박 의원에 대한 소속 당의 처분을 두고 의견을 내고 있으며, 찬반 여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.

/목포=정해선 기자



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실·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’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. <영광군 제공>

영광 ‘재생에너지 군민참여 모델’ 도출

최종보고회서 투자금 차등 기준 마련

수익금 10%별도 적립…아동 균등 분배

영광군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 도 활성화를 위한 표준 모델을 도출했다.

영광군은 “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실·과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‘영광군 재생에너지 발 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 역’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”고 31일 밝혔다.

최종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녹색에 너지연구원이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, 영광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표

준모델을 제시했다.

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참여에 따른 투자금 차 등 기준을 마련했다. 발전 사업의 영향 정도를 고 려해 송·변전설비 인근 주민의 경우, 태양광·육 상풍력의 경우 15배, 해상풍력의 경우 3배까지 투 자할 수 있도록 차등 기준을 확정했다.

아동(18세 미만) 지원을 위해 참여 수익금의 10%를 별도 적립, 영광군 모든 아동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.

또한 주민 참여를 위한 협동조합 등 단체 구 성 절차와 정관·규약 등의 표준안을 완성하고,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발전사업 대상 지 발굴 및 이익공유발전소 지정·평가기준을

구축했다.

이와 함께 읍·면별 이장 및 기관·사회단체 장, 어업인,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안에 반영 했다.

영광군 관계자는 “이번 용역을 통해 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의 이익이 군민들에게 공유되도 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설명회를 통 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영광만의 군민참여 모델을 완성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 명회를 개최해 군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 고,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/영광=김동규 기자

함평군, 청림 공직사회 실현 ‘주력’

청렴명예감사관 부패취약 분야 논의

함평군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 감사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.

31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 군청 소회의실에 서 2025년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간담회를 성 공적으로 개최했다.

청렴명예감사관 제도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 이 있거나 사회적 신망이 높은 주민을 민간 감 사관으로 위촉해,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공 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.

이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함평군의 주요 청렴시책 중 하나로,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된다.

올해는 제6기 청렴명예감사관 11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며, 2년의 임기 동안 주민의 시각에서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이끄는 데 중 심 역할을 하고 있다.

이들은 군정 전반에서 위법·부당 행위에 대 한 개선 권고, 예산 절감 방안 발굴, 주민 불편사 항 제보 등 역할을 수행한다.

특히 상반기 주요 건설사업장 기동 감사에 토

목시공기술사 자격이 있는 청렴명예감사관이 참여해 29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등 주 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한 사례 로 평가받는다.

간담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해 제6 기 함평군 청렴명예감사관 등 10명이 참석해 군의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 의하는 등 청렴도 상승을 향한 굳은 의지를 함 께 다졌다.

이상익 군수는 “청렴은 공직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군정에 대한 군민 신뢰 의 근간”이라며 “청렴명예감사관들과 함께 청 령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

/함평=김연수 기자

영암군 “RE100산단 지정 건의”

국정위 방문…그린시티·바둑연수원 등

영암군이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, RE100산 단 지정 건의를 요청했다.

31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종로 국 정기획위원회에서 박용준 기획분과장을 만나 새 정부 정책기조와 일맥상통하는 영암 주요 사 업들을 제안하고, 국정과제로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.

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서남권 재생에너지 산 업 육성과 인프라 확충 국정기조와 관련한 영암 군의 ‘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’ 정책을 건 의했다.

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과 풍력, 대규모 전 력 소비처인 대불국가산단 등이 있어 영암군이 RE100산단 지정과 에너지지산도시 건립의 최적 지임을 강조했다.

‘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 업’·‘분산에너지 활용 VPP(통합발전소) 플랫 폼 구축사업’ 등으로 이미 관련 사업을 시작하 고 있는 경험을 내세워 즉시 새 정부의 재생에 너지 정책을 수행하며 모범을 창출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.

또한 지역 특성과 정부 정책을 연결한 ▲국립



우승희(왼쪽) 영암군수가 지난 28일 박용준 국정기획위 원회 기획분과장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. <영암군 제공>

바둑연수원 건립 ▲국립공원 엑스포밸리 조성 ▲천년미한 문화융합 사업 ▲영산강 생태계 복 원 등 사업 등을 설명했다.

우승희 영암군수는 “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선도하며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모델을 세울 준 비가 돼 있다”며 “국토 서남권 초광역 경제권으 로 도약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암군의 다양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길 바란 다”고 말했다.

/영암=나동호 기자

신안, 다이아몬드 해역 ‘조피불락 종자’ 방류

어업인 소득 ↑·낙시관광 활성화

신안군은 31일 “다이아몬드 해역에 조피불락 종자 35만 마리를 추가 방류했다”고 밝혔다.

앞서 지난 5월 말에는 다이아몬드 해역에 쥐 노래미 종자 55만 마리를 방류했다.

이번에 방류하는 조피불락은 국립수산물질 관리원의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 이상의 건강하고 활력이 좋은 종자로, 다이아몬드 해역 내 어초 투하 지구에 해당 지선 어촌계(어업인) 와 함께 선상 방류할 계획이다.

다이아몬드 해역은 신안군이 2022년부터 2027 년까지 총 90억원의 예산을 투입, 수산자원(쥐

노래미, 조피불락) 산란·서식장으로 조성 중인 해역으로, 지금까지 1천27개 어초 투하와 수산 종자 95만 마리를 방류했으며, 오는 10월 중에는 2025년도분 어초 194개를 추가 투하할 계획이다.

이 밖에도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중앙부처(해 양수산부) 공모 사업 참여를 위해 지난해 12월 중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, 2026년도 불락류 산란·서식장 조성(50억원) 기본계획을 수 립 완료해 현재 공모를 기다리고 있다.

김대민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“다이아몬드 해 역을 바다 낙시터 관광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고 자 수산자원 산란·서식장 조성을 지속 추진하 고 있다”고 말했다.

/신안=양훈 기자



14일까지 신지 명사십리 일원

완도군은 31일 “오는 8월14일까지 신지 명사 십리 일원에서 ‘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 램’을 무료로 운영한다”고 밝혔다.

프로그램은 군민,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 며 ▲래프팅(6인) ▲가약(1인) ▲가약(2인) ▲ 서프 보드 ▲딩기 요트 등 무동력 레저와 ▲세 일링 요트 ▲크루즈 요트 등 요트 체험이 진행 된다.

<사진>

단 서프 보드는 경력자에 한 해 이용 할 수 있 고, 참가자들은 필수 교육으로 심폐소생술 및

해상안전 교육을 들어야 한다.

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화·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,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이며,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.

프로그램 참가는 선착순 모집이며 요트 체험 은 명사 방파제 인근(명사십리길 111)에서, 무 동력 레저 기구는 명사십리 이벤트 광장(신리7 81-3)에서 신청을 받는다.

완도군 관계자는 “여름을 맞아 주민과 관 광 객을 위해 준비했다”며 “시원한 바닷가에서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겨보길 바란다”고 말 했다.

/완도=윤보현 기자